

제384회 국회(임시회)
정 무 위 원 회

업 무 보 고

2021. 2. 17.

금 융 위 원 회



목 차



I .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	1
II . 2021년 핵심 추진과제	3
1.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잠재리스크 관리	
2.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	
3.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	
4.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	
[별첨] 2월 국회 추진 주요법안	22

I. 2021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

1

업무추진 여건

① (위기극복) 우리 경제의 코로나19 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금융의 실물지원 역할 확대 불가피

-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강화로 매출급감에 직면한 소상공인·취약 기업의 긴급자금수요 점증 → 과감한 실물지원 지속 필요

* 소상공인매출(전년동기비, %): (11.4주)△22 (12.1주)△23 (2주)△29 (3주)△32 (4주)△56

- 실물지원 과정에서 유동성 공급에 따른 불가피한 가계·기업부채 누적, 한계기업 증가 등 잠재리스크 확대 → 단계적 정상화 필요

② (미래대비) 향후 우리경제의 새로운 먹거리로서 新성장동력 확보 지원

- 저출산·고령화 심화, 4차 산업혁명 진전 등 대내외 위기·도전요인 가속화 → 미래먹거리 발굴을 위한 집중 투자 필요
- 한국판 뉴딜, 2050 탄소중립, 혁신성장 등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전략 추진중 → 금융의 자원배분 역할을 통한 新산업 견인

③ (금융혁신) 최근 가속화된 경제·사회 전반의 구조적 변화에 대처

- IT기업-금융회사 상호간 고유영역 침투가 심화되고 디지털 금융 혁신도 가속화 → 새로운 금융행태에 대한 관리·감독체계 구축
- 기존 금융권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속에서 자체적 변화 요구에 직면 → 보험·지역금융 등 미진했던 금융분야 혁신 필요

④ (금융소비자보호) 금융정책의 최고 핵심가치로서 금융현장에 내재화

- 각종 금융사고 방지 등 금융소비자·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 → 궁극적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제고
- 서민금융 확대 및 맞춤형 지원 등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애로 해소 지속 → 과거 경제위기 이후 심화되었던 양극화 현상 완화 도모

2021년 금융정책 추진방향

비전

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금융
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창출하는 금융
국민과 함께하는 금융 ”

미션



미증유의
감염병발 위기를
질서있게 극복



미래를 향한
과감한 투자를
적극 뒷받침



금융산업 자체
경쟁력을 높여
한 단계 도약



금융소비자
보호를 두텁게,
금융포용성 제고

추진전략

I.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리스크관리

- ①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
- ② 한시적 금융지원조치의 점진적 정상화
- ③ 잠재리스크의 안정적 관리

II.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

- ① 뉴딜펀드·뉴딜금융 시장안착 도모
- ② 녹색금융 활성화
- ③ 디지털혁신 뒷받침 금융인프라 구축
- ④ 혁신기업 금융지원 활성화

III. 금융산업 혁신 및 디지털금융 확산

- ① 언택트 금융 활성화
- ② 핀테크 육성 가속화
- ③ 지역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 추진
- ④ 보험산업 혁신 도모
- ⑤ 제재·인허가 절차개선 및 지배구조 내실화

IV. 금융소비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

- ① 최고금리 추가 인하 및 보완방안 추진
- ②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
- ③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및 보호 강화
- ④ 소비자피해 집중분야 감독 강화

Ⅱ. 2021년 핵심 추진과제

1

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 및 잠재리스크 관리

가.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

① “175조원 +@ 프로그램”의 차질없는 이행

- ❶ (소상공인 자금지원) 집합제한 소상공인(3조원) 및 일반피해 소상공인(3.6조원)에 대한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 완화 추진

* 집합제한업종 : 1년차 면제, 2~5년차 0.3%p 차감 / 일반피해 소상공인: 1년간 0.6%p 차감

- ❷ (저신용 회사채·기업어음(CP) 매입기구) 특수목적기구(SPV)의 회사채·CP 매입기한 6개월 연장('21.1.13일→'21.7.13일) 및 비우량채(A~BBB) 매입비중 확대

* 신용등급별 매입비중(변경前→後) : (우량채) 30%→25% (비우량채) 70%→75%

- ❸ (코로나 피해대응 유동화회사보증(P-CBO)) 지원대상을 중소기업까지 확대(현행 대기업·중견기업)하여 비우량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

* '20~'22년간 11.7조원 공급 예정('20년중 3.6조원 공급)

- ❹ (기간산업안정기금) 기금 지원 신청기한(現 '21.4월말) 연장 추진

- ❺ (채권시장안정펀드) 채권시장 불안요인이 불식될 때까지 존속시켜 시장안전판 역할을 확고히 수행(매입약정기간 : ~'23년말)

- ❻ (협력업체 지원)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 연장('21.2월초→'21.4월말)

- ❼ (기업자산 매각지원) '21년중 1조원을 지원하고, 기업의 다양한 자산매각 수요를 뒷받침하도록 캠프의 자본을 확충

* 6,5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 실행 완료('21.1.18.)

② 금융지원 실태 수시점검 및 현장소통 강화

- ① “코로나19 금융지원 현장점검반”을 운영하여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신속지원 추진
- ② 기 운영중인 “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”을 통해 지원실적 및 애로사항 상시 점검 지속

나.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의 점진적·단계적 정상화

① 기 시행중인 쏘금융권 만기연장·상환유예* 조치의 연착륙 추진

*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·중소기업 대상 시행중('20.4.1.~'21.3.31.)

- ① 코로나19 상황, 실물경제 여건 등을 감안,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기한* 재연장 여부 등 결정

* 신청기한을 당초 '20.9.30일 → '21.3.31일로 한차례 연장('20.8.27일)

- 금융권·산업계 대상 릴레이 의견수렴('21.1~2월)을 추진하고, 코로나 방역상황, 실물경기 흐름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추진방안 발표('21.2월)

- ② 실물경제 회복으로 상환유예 조치 정상화가 가능한 경우에도 차주 상환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 준비
- ③ 만기연장 등에 따른 부실이연 가능성에 대비하여, 대손충당금·자본확충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손실흡수능력 보장 유도

②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*의 점진적 정상화

*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회사의 실물경제 지원여력 확충을 위해 자본·유동성·영업 규제 등을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적용중('20.4.17.~)

- ① 금융권 건전성 및 실물경제 지원여력 등에 대한 점진적 결과를 토대로 기한부 조치*의 연장·보완 등 검토

* 유동성커버리지비율(LCR)규제 한시적 완화('21.3월말까지),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('21.6월말까지) 등

- ② 정상화 추진시 이해관계자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충분한 예고 및 적응 기간 부여

다. 잠재리스크의 안정적 관리

①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강화

❶ 적정 수준의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연착륙 도모

- 급격한 가계부채 관리가 우리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장기적 시계(視界)하에 관리*

* (예) 가계신용 증가율이 향후 2~3년 이내에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'19년도 수준 (4~5%대)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탄력적으로 대처

-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도입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선별하여 적용*하는 방안 검토

* (예) 코로나19 대응이 아닌 불요불급한 대출 취급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유연화 연장·정상화 과정에서 차별 적용 등

❷ 「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」 마련('21.1분기) 등 제도정비를 통한 리스크 관리

- 현행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 관리방식의 차주단위 전환 등*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관행 정착 유도

* (예) 현행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(DTI) →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(DSR)로 단계적 대체 등

-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중인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* 방안 검토

* (예) 일정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등

- 다만, 시행시기는 방안별로 차별화하여 단계적·점진적 추진

❸ 가계대출이 갖는 경제·사회정책적 측면을 고려한 미시적 관리

-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서민·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신용 공급 기조는 지속 견지

- 장기모기지 도입,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*을 통한 청년층·무주택자 대상 주거사다리 금융지원 강화

* (예)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미래소득 추가반영 또는 적용만기 장기화 허용 등

② 기업부채 상시 점검체계 구축 및 유형별 Two-track 관리 추진

① (기업금융 점검체계 선진화)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

- 금융권의 산업별 익스포저 등에 대한 체계적 분석체계* 마련
 - * 업종별·기업규모별로 업황 및 리스크 요인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
- 기업업황 및 금융권 익스포저 관련 자료를 집중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(DB) 플랫폼 구축
- 산업별 기업금융·기업부채 리스크 요인 점검, 적정 익스포저 관리 유도 등을 위한 “(가칭)산업별 기업금융 안정지수*” 개발 추진**

* (예) 기업부채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거시·산업·금융 지표를 선별해 지수화

** 금년중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개발을 검토하고 시범적용을 통해 활용방안 모색

② (Track 1) 코로나19로 “일시적 유동성 부족”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75조원+@ 프로그램 및 추가 대책을 통해 충분한 신용 공급

-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기업의 기존 대출 금리인하,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프로그램 신설(기은, 「코로나19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」)
- 재무구조 개선, 금융비용 절감* 등을 지원하는 「1조원+@」 규모의 대출·투자 프로그램 신설(산은, 「재무안정 동행 프로그램」)
 - * 대출 초기에는 원가수준 금리로 지원하고, 경영안정화 이후 초기년도 차감금리를 수취
-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컨설팅 및 신규자금 등 지원 확대(신보, 「밸류업 프로그램」)
 - * (‘20) 3개 은행과 협약, 83개 기업 지원 → (‘21) 6개 은행과 협약 추진, 120개 기업 지원 목표
- 기간산업과 협력업체 지원을 위해 기반기금의 적절한 활용·투입

③ (Track 2) 환경변화 과정에서 “구조적 어려움”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 유도

- 정책금융기관*을 통해 '21년중 총 13조원의 사업재편·설비투자 자금 지원
 - *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및 사업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(산은), IBK시설투자대출(기은) 등
-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설비매각 지원 프로그램* 도입
 - * 기계거래소가 보관·거래가능한 설비를 캠프가 先매입(‘21년 시범운영)
- 기업구조혁신펀드(‘20년 2.7조원 → ‘21년 3.7조원)의 활용도 제고*
 - * 대형신생 운영주체(GP) 등 운용사의 다변화 유도, 다양한 대출금리조건으로 부채투자펀드 운용 등

가. 정책형 뉴딜펀드 및 뉴딜금융의 시장 안착 도모

①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 및 투자 개시

① '21년중 최대 4조원 목표로 자펀드 조성 추진

* (조성절차) 자펀드 운용사의 제안서 제출('21.1월) → 운용사 심사 및 선정('21.2월)
→ 민간자금 매칭을 통해 순차적으로 자펀드 결성('21.4월~)

② 일반 국민들이 뉴딜분야 투자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 조성(1,400억원 목표)

* 뉴딜 투자사업 풀(pool)이 일정수준 확보된 시점에 맞추어서 출시 추진('21.3월~)

② '21년중 17.5조원 규모의 뉴딜금융 본격화('21~'25년간 총 100조원)

① (대출) 뉴딜기업의 사업화·성장·해외진출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 특화 대출프로그램 및 온렌딩 지원(11.9조원)

* 대한민국 대전환 뉴딜 특별자금(산은, 금리우대 최대 △0.8%p), 스마트그린산단 대출(기은, 금리우대 최대 △1.0%p), 특별온렌딩(산은, 일반 온렌딩 대비 금리우대 최대 △0.10%p) 등

② (투자) 뉴딜분야 중소·벤처기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자금(0.2조원) 공급

* 뉴딜 벤처·스케일업 투융자프로그램(산은, 주식·전환사채 등 맞춤형 투자지원) 등

③ (보증) 뉴딜기업의 사업화 단계별(연구·개발(R&D)→사업화→성장)로 특화된 우대보증(5.4조원) 제공

* 뉴딜 신성장 분야 우대보증(신보, 보증료율 최대 △0.4%p 및 보증비율 최대 95%)

④ (민간금융 활성화) 정책금융을 마중물로 민간금융이 자발적으로 뉴딜금융에 참여하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사업설명회 등 개최

나. 녹색금융 활성화

① 녹색분야 산업·사업·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의 선도적 지원 강화

- ① 정책금융 중 녹색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('19년 6.5% → '30년 13%)하고, 정책형 뉴딜펀드를 마중물로 시중자금의 녹색투자 확대 유도

- 녹색분류체계* 확립시, 녹색특화 대출·보증 프로그램** 신설 검토

- * 녹색에 해당되는 산업·기업을 규정하여 녹색범주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

- ** (예) 녹색특별대출, 녹색기업 우대보증, 특별온렌딩 등

- ② 녹색분야 전환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,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 수요를 뒷받침*

- * (예)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및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 운용, 기업구조혁신펀드 확대

② 금융권의 자발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지원

- ① 저탄소사회 전환과정에서 발생가능한 금융리스크 관리·감독방안 수립

- 「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가이드스」를 마련하여, 민간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기후리스크*를 식별·측정·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

- * (물리적 리스크) 기후변화에 따른 실물부문 물적피해로 인한 시장·신용리스크 등 (이행리스크)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고탄소 기업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리스크

- ② 경영시계(視界)가 단기화되기 쉬운 금융회사 경영목표에 녹색금융이 내재화되도록 「금융권 녹색금융 가이드라인*」 제정·시행

- * (주요내용) 녹색분류체계 정비, 금융회사내 녹색투자 의사결정체계 수립 등

③ 기업·투자자들의 투자결정시 ESG요소가 고려되도록 제도기반 정비

- ① 기업이 직면한 환경리스크 및 관리시스템 등 환경정보가 폭넓게 공개되도록 공시의무의 단계적 강화 방안 마련

- ② 스튜어드십 코드('16.12월 제정) 시행성과를 평가하고, 이를 토대로 환경관련 수탁자책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*

- * 최근 英·日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해 기관투자자의 ESG 수탁자 책임을 강화

- ③ 녹색통계, 관련자료 등이 기업·투자자들 및 금융회사 상호간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정보공유 플랫폼 구축 추진

다.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

① 담보 없이도 데이터만으로 자금을 공급받는 환경 조성

- ① 플랫폼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소·소상공인 등에 대해 낮은 비용의 자금을 지원하는 「플랫폼 금융* 활성화 방안」 마련

* (예) 플랫폼에 축적된 비금융 데이터, 카드결제, 거래내역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상공인, 소규모 사업체 등의 신용도 평가

- ② 데이터 융합·활용 활성화를 위한 「금융권 데이터개방 네트워크*」 구축 및 타 분야와의 연계** 추진(신정원·금융결제원 등)

* 신정원·결제원·공공기관 등의 금융권 데이터를 연계·결합후 개방하는 시스템

** (예) 유통, 통신, 의료, 교통 등 분야별 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 추진

② 금융분야 인공지능(AI)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

- ① 인공지능(AI)을 활용한 금융서비스가 활발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에 데이터* 및 테스트베드** 제공(신정원·금융보안원)

* 가명정보 형태로 데이터를 집중하고, 금융용어를 인공지능(AI)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처리하여 제공(가칭 : 데이터 도서관(library))

** 인공지능(AI) 기술 연구·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및 분석도구 등 지원

- ② 금융소비자가 인공지능(AI)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「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*」 마련(금감원 등)

* 인공지능은 ①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알고리즘으로 서비스내용이 결정되고, ②집행과정에 사람(책임자)개입이 없는 특성 → 소비자보호 등을 위한 운영원칙 필요

③ 국민들이 자기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 구축

- ① 금융사와의 「안전한 개인신용정보 전송 시스템」 구축 등을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 안착*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

*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본허가 완료('21.1.27) 이후 신규사업자 허가진행 예정

- ② 국민들이 “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”하는지 명확히 인지하고 정보제공에 동의하도록 동의서 양식 개편(「알고하는 동의*」) 등 추진

* 기존의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과 별도로, ①직관적이고 ②가독성·가시성이 높은 「신용정보 이동권 행사 양식」 마련

라. 혁신기업 금융지원 활성화

① 「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」 지속 발굴 및 민간투자 확산

- (선정분야 확대) 선정기관을 다변화*하여 콘텐츠,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업을 발굴('21년중 최대 400개 이상, 현재 279개 선정)

* (현행) 산업부, 중기부, 과기정통부, 복지부, 해수부
(개선) 현행 참여부처 + 문체부, 국토부, 환경부, 농식품부 등

- (민간투자 확산) 뉴딜펀드 등 정책펀드 운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선정된 혁신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유도

* (예) 국가대표 1000 선정 기업 등에 일정 비율 이상 투자하는 운용사에 대한 초과 수익 인센티브 제공

- 국내외 투자설명회, 금융투자업계·벤처투자업계와 혁신기업 간 네트워킹 기회 확충을 통해 대규모 자금유치 지원

* 산은 기업설명회(IR) 플랫폼(넥스트라운드), 산은-대형 벤처캐피탈(VC) 협의체(Mega7) 등을 활용

② 자산·기술력을 토대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는 환경 구축

① 동산담보·지식재산권(IP) 등 非부동산 담보 활용 활성화 도모

- (동산담보)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동산담보법 개정을 재추진*

*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동산담보법 개정안을 법무부와 협의하여 재추진

- 유형자산 이외에 재고자산·매출채권 담보부채권도 캠프가 매입 가능토록 개선하여 동산담보 회수지원 활성화

- (IP금융) 「은행권 표준 IP 담보대출 취급기준*」 마련 등을 통해 IP금융 활성화 도모

* 적격담보 범위, 담보가격 산출기준, 담보인정 비율 등에 대한 표준기준 정립

- (상거래신용지수*) 신용도가 낮더라도 상거래신용지수가 양호한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상품 확대

* 기업의 상거래채무 결제능력과 경영활동성을 바탕으로 상거래 신용능력을 평가한 지수

- (상환청구권 없는 팩토링*) '21년중 총 400억원의 시범사업(신보)을 추진하여 매출채권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

* 판매기업이 구매기업으로부터 받은 외상매출채권을 신보에 매도하여 조기 현금화 (구매기업의 부도위험을 신보가 부담하며, 판매기업의 상환책임은 없음)

② 기술·혁신성 위주의 여신심사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

- 표준화된 기술평가 모형 마련 및 기술평가·TECH평가 체계 개편*

* (기술평가) 기술신용평가사(TCB)-은행간 기술평가 모형 일관성 제고 기술평가 결과 공유 체계 마련 등(TECH평가) 기술평가 품질·대상업종 등 질적지표 위주 개편 평가결과 활용방안 확대 등

- 신용·기술평가가 일원화된 통합여신모형의 단계적 도입 추진

③ 혁신기업의 코스피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장 특례 확대*

* (예) 시총 단독 요건 신설, 기존 시총요건(시총 6천억&자기자본 2천억) 완화 등

- 상장대상 기업의 발굴·육성 등을 위한 주관사의 적극적 역할 유도*

* (예) 증권사의 주관사 업무를 제한하는 기업공개(IPO) 기업 지분율규제 완화 등

③ 증권사의 중소·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기능 강화

① 벤처대출을 증권사의 겸영업무에 추가하고, 초기 중견기업*에 대한 대출·투자 관련 건전성 규제(NCR) 부담 완화

* 3년간 평균매출액 3천억원 미만(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적용대상인 중견기업 기준)

②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공여 추가 한도*에 포함되는 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에 M&A 리파이낸싱,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 추가

* 종투사의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%이나, 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 및 중소기업 대출은 자기자본의 100% 이내에서 추가 대출 가능

④ 크라우드펀딩의 혁신기업 성장지원 역할 강화

① 혁신기업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발행기업 범위(창업·벤처기업→비상장 중소기업)와 발행한도 확대(年 15억 → 30억원) 및 총 투자한도 2배 상향

② 중개기관이 기업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후속 경영자문, 오프라인 기업설명회(IR) 개최 등 허용*

* 현재 발행기업에 대한 중개기관의 경영자문이 금지되며, 크라우드펀딩을 위한 청약의 권유는 중개기관 홈페이지에서의 광고 또는 포털사이트 단순광고로 엄격하게 제한

가. 언택트 금융 활성화

① 「금융분야 비대면 신원확인·인증기준」 마련

- 지문·안면인식 등 신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안전하게 온라인·모바일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신원확인·인증의 요건, 절차 등 규율

* ① 다양한 혁신적 인증수단 등장을 위한 “기술중립성” 요건 제시
 ② 고액·고위험 거래에 대한 복수 인증방식(two factor 인증) 의무화 등

② 제2금융권 참여를 통한 오픈뱅킹 고도화

- ① 하나의 오픈뱅킹 앱을 통해 카드대금 조회 및 결제대금의 원스톱 은행계좌 이체가 가능하도록 카드사 참여를 차질없이 준비
- ② 하나의 오픈뱅킹 앱에서 은행계좌와 증권사계좌 등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도록 금융투자업자의 오픈뱅킹 참여 확대

③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혁신 지원

- ① 플랫폼기업 보유 빅데이터를 신용평가 등 금융서비스에 적극 활용

* ① 온라인쇼핑내역 등 비금융신용정보만을 활용해 개인신용을 평가하는 비금융 신용조회사(CB) 허가 추진
 ② 금융·비금융 정보를 융합하여 개인·기업신용을 평가하는 플랫폼이 출현하도록 제도 개선

- ②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비교판매 등이 활성화되도록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“1社 전속규제 예외” 허용

④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

- ① 제조·판매 분리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 및 금융상품 비교판매 과정의 공정경쟁 등을 규율한 「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」 입법 노력 강화
- ②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 관련 법령해석·모범사례* 등을 적극 제공하여 객관성·투명성 및 현장에서의 수용성 제고

* 금융소비자보호법, 보험업법, 전자금융거래법(안) 등

나. 핀테크 육성 가속화

①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금융·非금융 지원 강화

① 혁신성 있는 핀테크기업에 대한 정책금융·민간투자 등 지원 강화

- (정책금융) 성장단계별 자금수요에 맞게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

- * ① (창업단계) 「핀테크 지원센터」를 통해 창업자금, 임대비용 등 지원
- ② (사업화단계) 기술성·혁신성 등을 보아 신·기보 우대보증 지원 강화
- ③ (유망기업) 유망한 핀테크는 「혁신기업 국가대표 1,000」에 포함해 지원하는 방안 검토

- (민간투자) 「핀테크 혁신펀드」 지원규모를 확대('20~'23년 3천억원 → 5천억원)하고, 초기 핀테크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운영방식 개선*

- * (예) 「초기기업 투자전용 펀드(자펀드)」를 추가 조성, 직접투자 자원 중 일부는 반드시 초기기업 대상 투자재원으로 활용 등

②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확대 및 금융-IT간 융합(convergence)을 뒷받침하기 위한 「(가칭)핀테크 육성 지원법」 제정 추진

- * (주요내용) ①금융권의 핀테크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정(출자절차 간소화, 면책 등)
- ②핀테크 지원센터(지원기관), 핀테크 혁신펀드(투자지원 등) 법적근거 마련
- ③핀테크 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등

③ 핀테크 기업의 샌드박스 수과정에서의 맞춤형 컨설팅 강화*

- * (혁신금융서비스 지정前) 지정과 관련된 법률, 지원절차, 특허 등
- (혁신금융서비스 지정後) 사업 고도화 등을 위한 마케팅, 채용, 투자유치 전략 등

④ '21년중 「코리아 핀테크 위크」를 2회*로 확대 실시(예년 연 1회)하여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해외진출·IR 기능 지원

- * 상반기(5월) : 온라인 행사 중심 / 하반기(11월) :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개최형식 결정

② 혁신적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성을 시험해볼 수 있는 “場”으로서 「디지털 샌드박스」 시범 운영('21.上)

- 금융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(신용정보원)을 활용하여, 초기 핀테크·스타트업 등이 보유한 아이디어의 혁신성·사업성 테스트를 지원

- * 영국 금융당국(FCA)도 민간 신용조회사(CB)의 가상데이터 등을 활용해 '20.5월부터 운영중(현재 30개 기업의 아이디어를 테스트중)

③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의 내실화

- 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업자의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*」 입법 노력 강화

* 혁신금융사업자가 샌드박스과 관련된 규제개선을 요청 → 규제개선 결정시 샌드박스 지정기한을 규제개선 완료시까지로 연장

- ② 참신하고 다양한 샌드박스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채널 확충*

* (예) 디지털금융 협의회,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등

다. 지역금융기관의 건전한 발전 추진

① 지역금융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·감독을 통해 지역내 자금공급 활성화

- ① (지방은행)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리스크평가 및 경영실태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금융 여력 확충
- ② (상호금융) 대출취급구역 확대에 따른 지역자금 공급 원활화 및 지역·경제사회 조직과의 협력*(관계형 금융) 강화

* 복지·교육사업 관련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신탁조합의 출자 허용 등(신탁법 개정)

- ③ (저축은행)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한해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합병을 허용하는 인센티브 검토

② 건전경영을 통한 지역금융회사로서의 신뢰 확보

- ① (상호금융) 거액여신 및 특정업종 여신에 대한 리스크 중점 관리
- ② (저축은행) 부적격자의 우회인수를 차단*하고,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른 합리적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마련하여 고금리 관행을 개선

* 저축은행 모회사 인수 방식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회피하는 사례 방지

라. 보험산업 혁신 도모

① 국민 안전과 건강에 대한 보장기능 강화

- ❶ (실손의료보험) 사적(私的) 사회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*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

*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가입자간 보험료 형평성 제고를 위해 ① 비급여의 특약 분리, ② 기본 보험료는 인하하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도입, ③ 재가입주기 단축(15년 → 5년) 등

- ❷ (헬스케어) 보험업의 기능이 “위험보장(cure)”에서 “선제적 위험관리(care)”*로 확대되도록 디지털을 활용한 헬스케어 활성화 추진

* (예) 건강Data를 수집·분석 → 운동쿠폰, 건강상담, 보험료 할인 등 맞춤형 혜택 제공

- ❸ (자동차 보험)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료 상승, 소비자부담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미사고 관련 치료·보상 기준* 마련

* (예) 영국·캐나다 등은 경미사고의 치료과정에 따라 표준화된 치료기간·치료비용 등 운영

② 디지털 금융혁신 선도

- ❶ (특화보험사 진입) 실생활 밀착 소액·간단보험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소액단기보험업*을 도입하고, 디지털 보험사 추가 허가

* 실생활 밀착 소액·간단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사로서 설립 자본금(20억원)이 일반 보험사(300억원)의 1/15

- ❷ (자회사) 보험회사의 플랫폼, 마이데이터, 헬스케어 등 新산업 투자·육성이 확대되도록 자회사 소유규제 정비

- ❸ (비대면·디지털 모집채널 혁신) 플랫폼 기반의 보험서비스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*하고, 비대면·디지털 모집행위 규제 완화**

* 보험서비스의 법적성격(모집/광고/비교공시 등) 판단기준을 마련하고, 공정경쟁 및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상품범위·영업방식·수수료 등에 대한 행위규율 도입

** (예) 하이브리드(전화+모바일 결합) 모집 허용, AI설계사 도입, 화상통화 활용 등

③ 소비자 신뢰·경험 제고 및 경영건전성 강화

① (보험금) 손해사정의 객관성·공정성 제고를 위해 업무절차·기준, 자회사 위탁 편중, 불공정 행위 제재 등에 대한 규율체계를 재정비

② (책임성 강화) 독립보험대리점(GA)의 보험 판매책임 강화*

* (예) ①불법 적발시 다른 GA로 계약·설계사를 이관하여 제재 회피 → 계약이관 제한
②GA 영업정지시 다수의 소속설계사 생계 위협 → 영업정지대체 과징금 도입

③ (IFRS 17 도입 및 단기 실적주의 개선) IFRS 17 시행(23년)을 위한 법규개정 추진, 장기리스크 관리 유도를 위한 보험사 성과·보수체계 개선**

* 자본확충을 위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등 검토 ** 경영진 성과보수 이연기간 확대 등

마. 현행 제재·인허가 절차 개선 및 금융회사 지배구조 내실화

① 경직적 과태료 부과체계 합리화

○ 금융관련법령 위반행위의 경중,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·수준을 차등화하도록 부과체계·절차 개선

* (예) 경미한 위반사항은 경영지도, 회사 자율개선 사항으로 종결

②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*의 시장친화적 개선

* 금융업 인허가·승인 신청회사 관련 소송·조사·검사 진행시 절차를 중단하는 제도

① 금융업 인허가·승인의 심사중단 및 심사재개 요건·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, 절차의 투명성 및 처분상대방의 예측가능성 제고

* (예) 심사중단을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, 심사중단이 과도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심사재개 사유 구체화

② “금융산업의 역동성”과 “법적 안정성”이 적정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업권별 특수성 등을 고려한 단계적 도입방안 마련

③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내실화

○ 금융회사의 경영자율성을 제고하되 책임성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제도와 현장관행의 격차 축소 추진*

* (예) 「금융회사 지배구조법」 시행 5년을 계기로 내부통제기능이 금융회사 자율적 규범으로 작동되도록 뒷받침하는 제도개선, 금융권 내부고발자제도 활성화 등

가. 최고금리 추가 인하에 따른 후속조치 및 부작용 보완방안 추진

①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

- ❶ 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 햇살론¹⁷ 금리 인하 및 20% 초과 대출* 대환상품의 한시적 공급 검토

* 20% 초과대출 차주 239.2만명(16.2조원), 평균 이용금리 24% 수준('20.3월 기준)

- ❷ 안정적 자원 마련을 위해 「서민금융법 개정안^{*}」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고, 금융권이 설계**하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추진

* 출연대상 금융회사 확대 및 상시출연제도·휴면금융자산 이관제도 도입 등

** 금융권이 '보증부 서민금융상품' 개발·제시 → 서민금융진흥원이 심사 후 보증공급

②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서민금융 공급 유도

- ❶ 최고금리 인하에 맞추어, 중금리대출금리 기준*을 하향 조정하고 중금리대출 취급 우수 금융회사에 예대율 등 추가 인센티브** 부여

* (예) 상호금융 : 신용등급 4등급 이하에 70% 이상 공급되는 가중평균금리 8.5% 이하 및 최고금리 12.0% 이하인 대출

** (예) 사업자 중금리대출('20.11월 출시) 취급 실적 우수 저축은행에 대해 예대율 우대 등

- ❷ 서민대출 우수 대부업체* 등에 대한 자금조달, 영업규제, 제재 측면의 각종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

* 법 위반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에 주력하는 대부업체 대상 인센티브 부여

- ❸ 금리인하요구권 및 대환대출 활성화 등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 유도

③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 지속

- ❶ 최고금리 인하 시행에 맞추어,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 단속 및 집중 홍보 실시

- ❷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「대부업법」 개정안* 국회통과 추진 및 초과지급이자 반환소송 등 피해구제·자활지원 강화**

*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해서는 6% 초과이자 무효화(반환청구대상) 및 처벌 강화

**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 및 정책서민금융 연계지원 활성화 등

나.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 강화

1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한 주식시장 공정성 제고

◇ 5.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한 공매도 부분재개 예정 (2.3일, 금융위원회 의결)

※ (코스피200) 전체 종목 수(917개)의 22%, 전체 시총(2,060조원)의 88%
(코스닥150) 전체 종목 수(1,470개)의 10%, 전체 시총(392조원)의 50%

○ 나머지 종목은 별도 기한없이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

◇ 시장참여자들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공매도 재개 이전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

① 자본시장법 개정(4.6일 시행 예정)으로 불법공매도 과징금·형사처벌 부과근거,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관의무 등 신설

→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* 등 하위규정 개정 및 시스템 구축

* (주요내용)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, 대차거래정보 보관방법 등

② 무차입공매도 점검주기 단축(6개월→1개월),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·감시 강화

-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 내 불법공매도 적발·감시 전담조직 신설

③ 개인대상 충분한 주식대여물량 확보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하되, 투자자 보호방안 병행 추진

- 증권사, 보험사 등 협의를 통해 2~3조원 정도의 대주물량 확보
→ 공매도 재개시까지 코스피200·코스닥150 종목 대부분 확보 예정

-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거래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투자교육·모의거래 등 의무화 + 투자한도* 설정

* (예) 초기투자시 3,000만원 →

2년내 5회이상 & 5,000만원이상 투자경험이 있을 경우 7,000만원 →

투자경험 요건 & 최초 투자 이후 2년경과시 제한없음

④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*하고,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 전면 적용

*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 금지, 고유동성 종목 시장조성 대상 제외 등

② 개인투자자의 투자상 불편사항 해소 및 장기투자 환경 조성

- ① 일반청약자의 배정기회를 확대하고, 균등방식 도입·중복청약 제한 등을 통해 배정방식의 형평성 제고

* '20.11월 기본방향 발표, 금투협 규정 개정(배정기회확대, 균등방식 도입)은 기완료

- ② 펀드운용 책임성 제고, 투자자 중심 판매환경 구축, 신규상품 도입 등을 통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('21.1월 방안발표)

* 펀드관계회사(채권평가회사·펀드평가회사·일반사무관리회사) 관리·감독 강화 병행 추진

- ③ 장기 주식보유시 세제지원 방안 마련*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세제지원 개편안** 의 차질없는 이행 추진

*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지원방안 검토 ** 일몰 폐지, 주식편입 허용 등

③ 안전하고 투명한 투자의 場으로서 투자자 신뢰 제고

- ① 「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투자자 보호 제도*」의 시장안착을 지원하고, 해외 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투자자 보호 강화**

* 원금손실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녹취·숙려제도 적용, 핵심설명서 교부 등

** (예) 해외선물·옵션 투자시 사전교육 의무화 등 국내외 규제 형평성을 제고

- ② 증권시장 불법·불건전행위에 대한 적발·감시체계를 강화*하고,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 등 제재실효성 강화

* 불공정거래 신고·제보 포상금 대폭 확충 ('22년 예산반영 추진)

- ③ 공시 사각지대 축소, 사업보고서 체계 개편 등 기업공시의 투명성 및 투자자 이용편의성을 제고

- ④ 사모펀드 전면점검* 및 제도개선 등 시장신뢰 회복 노력 지속

* (사모펀드) '20년말까지 약 60% 진행

(사모운용사) '20년말 18개사 진행 → 매년 약 50~60개사 검사 예정(~'23년말)

다.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및 보호 강화

① 청년의 주거금융비용 절감 및 목돈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출시

- ① 청년 전·월세대출 확대 공급, 보증료 인하 및 '비과세 적금'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 활성화*

* 주금공 외 민간보증기관까지 분할상환 전세대출 참여 확대, 비대면 채널 확대

- ② 내집마련 부담을 낮춘 초장기(40년) 정책모기지* 도입 검토

* 부동산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청년·신혼부부·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시범도입

② 고령화시대의 안정된 노후생활 대비를 위한 금융상품 제공

- ① 주택연금 수령방식 다양화* 등 주택연금 활성화 추진

* 나이가 들수록 주택연금 수령액도 증가하는 지급방식 도입 등

- ② 신탁을 노후대비·생활안정을 위한 종합자산관리제도로 개편

* (예) ① 신탁재산 범위확대 : 적극재산(금전, 부동산 등) → 소극재산(채무)·담보권도 허용
② 신탁재산 일부의 재신탁 허용(신탁영업 전문화, 다양한 신탁구조 출현 가능)

③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접근성·편리성 제고

- ① 은행, 제2금융권 등 모든 금융권 지점 및 현금자동인출기(ATM) 위치·특성정보*를 앱(App)으로 구축(가칭 '금융대동여지도')하여 소비자 접근성 제고

* 운영시간, 점포 유형, 폐쇄 예정 및 대체지점, 수수료, 제공 서비스 등

- ② 우체국과 제휴은행간 업무위탁 범위 확대(단순 입출금→통장개설), 지점 폐쇄 관련 제도 합리화* 등을 통해 지점폐쇄에 따른 소비자 불편 경감

* (예) 지점폐쇄 결정 이전 영향평가 실시, 지역재투자 평가시 지점폐쇄 여부 반영 등

④ 사회적금융 활성화 지원

-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*하고 우수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

* '21년중 공공부문에서 '20년 목표(4,275억원) 대비 20%이상 증가한 5,162억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하고 전용상품 다양화

** 우수기업에 대한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한도 상향(현 1~3억원 → 5억원)

라.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 및 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감독 강화

①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지원 강화

- ① “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준비 상황반*”을 운영하여 금융권 준비상황 점검 및 금융권·소비자 대상 홍보** 강화

* (구성) 금융위, 금감원, 소비자단체, 금융권 협회, 핀테크협회 / (운영) '21.2월~'22.1월

** (예) 설명회 개최, 금융권 임직원 교육, 영업현장 브로셔 배포, 금융교육 등

- 법령해석상 의문점 및 현장 애로사항 등에 대해 신속 대응

- ② 법 시행 후 6개월은 안착 지원 중심으로 감독하고, 이후 법 준수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* 추진

* 경미한 위법행위는 계도를 원칙으로 하고, 중대한 위법행위는 엄중 제재 추진

- ③ 농·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법 적용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('21.3월, 관계부처 합동)

② 보이스피싱, 유사금융, 가상자산 등 소비자 피해 집중분야 관리 강화

- ① (보이스피싱) 금융·통신·수사당국간 대응체계를 확립하고, 새로운 피싱기법 등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다양한 채널 활용*

* (예) 긴급재난문자, 공익광고 외 유튜브, SNS 등 온라인채널 등을 통한 상시홍보 추진

- ② (유사수신) 유사수신 범위 확대*, 금융당국의 조사·자료제출 요구권 및 처벌 강화 등을 규정한 「유사수신법 개정안」 입법 노력 강화

* 금융투자상품·가상자산 등을 명목으로 한 자금조달 행위, 수익률 보장, 표시·광고 이후 금전을 받는 행위도 규제

- ③ (유사투자자문) 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를 통한 미등록 투자자문, 불건전 영업행위 등 예방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관리·감독 강화방안 마련

- ④ (가상자산) 가상자산·가상자산공개(ICO)를 빙자한 불법행위*는 수사기관·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적극 대응

* 가상자산 다단계 판매 및 유사수신행위, 허위정보유포(pump&dump) 등

번호	법안명	주요 내용
1	서민 금융생활 지원법	<p><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자원구조 마련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서민금융 신용보증의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확대*하고 출연을 상시화 * 출연대상 금융회사 : 상호금융·저축은행 → 상호금융·저축은행·은행·보험·여전사(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) ○ 현행 '휴면예금 출연제도'를 '소멸시효 완성과 무관하게 장기 미거래 금융자산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'하는 제도로 개편 * 아울러 최종 거래일부터 10년 이상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예탁금 추가
2	전자금융 거래법	<p><디지털금융의 혁신과 안정을 위한 법제도 정비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혁신) 신규업종 도입(지급지시서비스업(MyPayment), 종합지급결제사업자), 규제 합리화(최소자본금 인하, 소액 후불결제 허용, 선불수단 한도 상향), 오픈뱅킹·디지털청산제도 법제화, 금융분야 인증·신원확인 제도 확립(공인인증제도 폐지 대응) 등 ○ (안정) 선불충전금 보호(외부 예차·신탁, 지급보증 보험), 플랫폼 영업행위 규율, 빅테크 관리체계(외부청산, 역외적용 등) 마련, 감독방향 전환(사후적발→사전예방), 클라우드 등 IT아웃소싱 관리 강화, 단계적 망분리 합리화(재택근무, 기술개발 등) 등
3	자본 시장법 (불공정 거래)	<p><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(미공개중요정보 이용, 시세조종, 부정 거래)에 대해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 ○ 부당이득액 입증이 어려워 제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*를 개선하기 위해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* 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, 시장질서교란행위 과징금은 부당이득액에 따라 가중
4	자본 시장법 (사모펀드)	<p><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및 제도 개편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판매사·수탁사 등 시장참여자를 통한 사모펀드 감시·견제 체계를 구축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○ 사모펀드 본연의 대규모 민간자금 공급역할 제고를 위해 기관 전용 사모펀드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편
5	금융 혁신지원 특례법	<p><법령정비 요청제 도입 및 법령정비 결정시 특례기간 연장근거 마련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례기간 만료 전(3개월전) 사업자의 '법령정비 요청제' 법제화 ○ 법령정비 필요성 판단 절차·요건 구체화 ○ 법령정비 결정시, 법령정비시까지 특례기간 자동 연장